

GLOBAL TREND

# 세계지방자치동향

##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신개념 사회보장정책

## 미국

미국 주 정부 간 재정격차: 총 과세 가능 자원

##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성 전환

## 중국

푸젠성 내 중국-인도네시아, 중국-필리핀 산업단지 조성

## 한국

투자심사사업 사후관리 개편방향



## 투자심사사업 사후관리 개편방향

### 이력관리제도 현황

- ▶ (도입 배경) 투자심사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1992년부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체 또는 상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통과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심사 시 사업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추적·관리가 불가능하였음
  - 이에 투자심사 이후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당초의 성과 달성 미흡 등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력관리제도 도입
- ▶ (추진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2017.12. 29. 개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해 관리하여야 함
  - 이력관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상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뉴얼 개정(2020.12.29.)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이력관리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 센터(LIMAC)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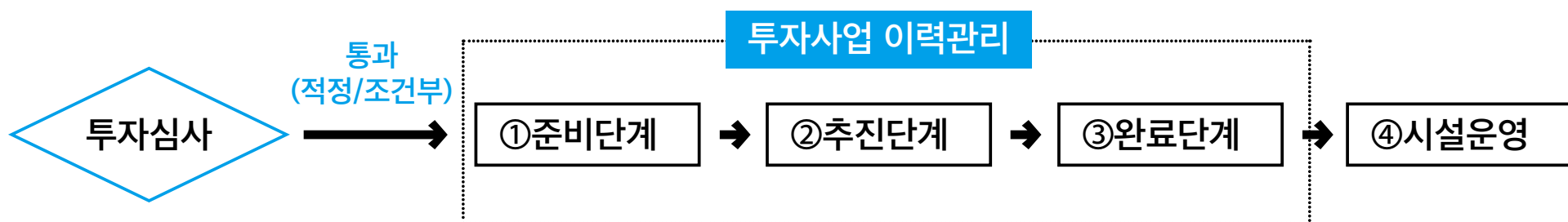
-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
- 대상 : 중투심 통과사업, 자체심 통과사업 중 500억원 이상 사업
- 관리범위 : 준공까지 일정, 투자심사결과, 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조달 등

《 이력관리 연도별 대상사업 건수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심사시기	'13~'15년	'13~'16년	'13~'17년	'13~'18년	'13~'19년	'13~'20년	'13~'21년
사업건수	186건	1,076건	1,323건	1,463건	1,416건	1,602건	1,666건

주: 2016년은 시범 운용기간으로 중투심 사업 중 500억원 이상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1. 현행 투자사업 이력관리 절차



## 현행 이력관리제도 문제점 및 한계

- ▶ (자료의 정확성) 현재 투자사업 이력관리 관련 정보는 각 사업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하고 있으나, 자료를 취합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 재확인과 수정의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력관리 정보는 사업담당자 변경 시, 사업 내용 및 추진 경과를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공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 변경 시 이력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입력과 제출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 (대상 및 범위) 500억원 이하 자체심 사업 및 준공 이후 운영단계 성과 관리 부재로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리 부실 우려가 있음
  - 대상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자체심사 통과사업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 이력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 개편방향

- ▶ 2022년 지방재정전략회의(2022.09.26.) 후속조치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재정투자심사 관련 개편방안이 논의 중임

- ▶ 그 일환으로 투자심사 사업의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와 투자심사결과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예정임
  - 특히 현재 운영 중인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확대 개편을 통해 관리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 투자심사 정보 공개
  - 현재는 자치단체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심사 통과여부만 주민에 공개하나, 투자심사 통과율에 대한 외부 공개 의무화 예정임
  -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투자심사 결과서 첨부 의무화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
-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확대 개편
  - (대상 확대) 이력관리의 사업대상을 중앙투자심사 및 대규모 자체심사 통과 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및 시도 의뢰심사와 시도 자체심사까지 포함
  - 현행 이력관리 제도는 중앙투자심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전문기관의 역할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시도의 자체적인 이력관리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이 수행하는 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함

그림 2. 이력관리 대상 범위 확대



- (범위 확대) 투자사업의 성과 평가 및 그 결과를 사전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로 환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력관리 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투자사업에는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으며, 모든 사업이 운영단계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단계 관리가 시급한 사업유형을 검토하고, 유형별 운영단계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평가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이력관리 관리범위 확대

